

2021년 01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67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21년 01 (Vol.67)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박소현
발행일	2021년 2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김영현, 송유미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산림청, '구조용 집성재' 내화구조 표준으로 인정

국토부,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돌봄센터와 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부,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개선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및 행정 예고

국토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남도, 신규 농어촌민박 및 펜션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 시행

7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 지구계획 수립

환경부, 건강영향 중심 소음관리 내용의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수립

인천시, '개항장 단기 활성화 추진계획' 추진으로 도시재생 및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광주시,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시민 의견 수렴

강원도, 제4차 강원도 종합계획 '2040 미래강원' 최종보고회 개최

제주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아이디어 공모

10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추진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실시

문체부, 주민들이 만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지정

국토부, '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

국토부·서울시, 수도권 주택 공급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8곳 선정

국토부, 정주 여건 회복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역 도시재생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결합하여 정비
부산시, '경부선 철도 유희부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광주시, 21년도 도시숲 사업 대상지 25곳 선정
광주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확대 추진
경기도, 도심녹화 위해 '그린커튼' 조성사업 87곳 추진
충북도, '우리마을 뉴딜사업' 3,079 마을 3,673개 사업 추진
전북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4개 지구 선정
경남도, 청년주택 추가 개소 등 '2021년 청년 주거지원정책' 추진
경남도,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10곳 추진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22

산업부,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국가표준 제정안 확정 고시
조달청, 건설현장 관리 지원하는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 구축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확산 도모하는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광주시,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구축 등 시민 친화적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
경기도, 도내 공유시설 온라인 예약서비스 '경기공유서비스' 시행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충남도,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충남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빈집 실태조사 완료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1년 01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산림청, '구조용 집성재' 내화구조 표준으로 인정

국립산림과학원, 2021.01.0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조용 집성재가 내화구조 표준으로 인정됨에 따라 큰 비용과 긴 시험 대기시간이 필요하던 내화시험을 생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대형 목조건축 보급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9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대표적 중목구조 부재인 구조용 집성재의 내화성능 표준화 공동연구를 통해 기초 연소 특성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내화구조 표준 인정을 추진하여 지난 12월 22일에 이를 인정·공고하였다.

이번 표준 인정으로 KS F3021 구조용 집성재(낙엽송류를 포함한 수종 A군)의 생산업체는 기둥, 보에 대해 내화시험 없이 공장심사만으로 내화구조 인정이 가능해져, 1년 이상 걸리던 내화구조 인정절차가 약 1개월로 단축되었으며 한 번 받은 인정은 영구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목재의 탄화두께를 바탕으로 2시간까지 성능기반 내화설계가 가능하여 12층까지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정책과, 2021.01.05

완료

건축
정책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공동주택은 1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 이상 -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마련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 - (적용 대상)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국토부, 돌봄센터와 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택건설공급과, 2021.01.05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①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작년 3월 6일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②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③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는 7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하였다.

④ 국기봉 꽃이 설치 기준 개선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꽃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개선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및 행정 예고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과, 2021.01.14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아울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국토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도시정책과, 2021.01.19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 -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 -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 -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②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③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경남도, 신규 농어촌민박 및 펜션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 시행

소방본부, 2021.01.21



경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농어촌민박 및 펜션에 대한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

경남소방본부, 관광진흥과, 농업정책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농어촌 민박 및 펜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민박·펜션 신규 영업신고(신청) 시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기존에 영업 중인 민박 및 펜션도 오는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비된 소방시설은 정비하고,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 지구계획 수립
공공택지관리과, 2021.01.05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19)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20)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

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하여 발표된 신규 택지개발지구로서, 금년부터 조성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환경부, 건강영향 중심 소음관리 내용의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수립
생활환경과, 2021.01.21



환경부는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의 소음·진동 크기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등 여러 대책을 담았다. 이번 종합계획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소음·진동 국민 만족도 40% 달성과 소음·진동 노출인구 10% 감소’를 정책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 과제를 구성했다.

인천시, '개항장 단기 활성화 추진계획' 추진으로 도시재생 및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재생콘텐츠과, 2021.01.22



도시
정책



인천시가 ‘스마트한 문화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개항장’을 목표로 개항장 문화적 도시재생 및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개항장 단기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초로 지어진 근대건축물, 화려했던 조계지(외국인 거주 지역)의 흔적, 최초의 근대식 컨테이너 항만 등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개항장 곳곳에 품고 있다. 이에 시는 개항의 역사를 살린 콘텐츠 위주의 문화재생모델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국내 최초 스마트관광도시’ 타이틀을 따내고, 지난 연말 관광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역사·문화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시,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시민 의견 수렴

도시계획과, 2021.01.10



도시
정책

광주광역시 20년후 광주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은다.

광주시는 2040년 광주의 미래상과 계획목표를 설정하는 ‘시민참여 기획단’과 함께 11일부터 ‘2040 광주 플랜’ 홈페이지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년 후 광주의 미래상, 공간구조, 생활권, 주거, 교통, 관광, 산업경제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2040 광주 플랜’ 홈페이지는 시민 협의체인 ‘시민참여 기획단’이 시민 눈높이로 담은 도시계획의 시기별, 단계별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시민의견 접수는 광주시 홈페이지 ‘2040 광주 플랜’ 배너 또는 ‘2040 광주 플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강원도, 제4차 강원도 종합계획 '2040 미래강원' 최종보고회 개최

정책기획관실, 2021.01.11



강원도가 2040년 강원도의 미래 모습을 구체화 한제4차 강원도 종합계획인 「2040 미래강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40 미래강원」은 북방평화경제권 거점, 웰니스 공동체, 동북아 1일 생활권 중심 강원으로 3대 목표를 정하고 6대 추진전략별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강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또한, 2040년 미래강원 종합발전 구상을 위해 제시한 공간전략(U-HI 벨트)을 근간으로 「2040 미래강원」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본 계획에는 산업·경제, 교통, 관광, 환경 등 각종 부문별 발전전략과 18개 시군 발전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아이디어 공모

정책기획관, 2021.01.04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공동으로 1월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아이디어(제안)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내용은 ①국제자유도시를 상징화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②물, 주거, 쓰레기, 주차 등 생활·환경 관련 문제 해소 사업, ③교통, 물류 등 제주의 물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④1차산업, 제조업, 문화·관광 산업, 에너지,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 ⑤기타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제주다움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 등과 관련한 아이디어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사업 구상에 반영할 방침이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추진

녹색건축과, 2021.01.03



국토교통부와 LH는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 에너지 특화도시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당수 2지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 Zero Energy Building)을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지난해 도시 전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목표로 구리갈매역세권 및 성남복정1지구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번 특화도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률 50% 이상, 탄소저감(CO2) 5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또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도시 패시브(자전거도로, 바람길 등) 요소와 도시에너지 관리시스템, 주택 난방·급탕 에너지절감형 시스템 등 미래기술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제로에너지 시범도시에서 수립한 에너지도시 설계 기법 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정부·지자체·학계·민간’이 참여하는 ‘제로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기술자문 및 관리운영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홍보관을 건립하여 제로에너지 도시의 홍보·견학·시민참여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실시

시설안전과, 2021.01.04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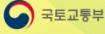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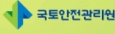
도시
정책

안전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1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 40%~6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시설은 지자체 소관 시설 중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미흡), E(불량)등급과 같이 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노후 기반시설을 **Change** 하고, 성능 **Up** 하자!

기반시설 체인지업 (Change-Up) 챌린지 공모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관리가 시급한
지자체 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으로
재정지원!!**

사업대상
개선시급한 취약시설의 관리주체인 광역·기초자치단체
※ 취약시설 : 「시설물안전법」, D·E등급 시설물 등

사업신청
신청기간 '21.2.1.(화) ~ 2.10.(수) 18:00까지
결과발표 '21.3.2.(화)
신청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류제출
자세한 사항은 공모계획서 참조

지원내용



지원규모

- 기반시설별 평균 5억원(국비50%, 지방비50%) 내외의 시범사업 지원
- 개선시급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사업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

평가방법

평가기간
'21.2.16.(화) ~ 2.26.(금)

평가방법
국토교통부 예비평가 및 평가위원회 평가

| 문의 |  국토교통부 044-201-4997  국토안전관리원 055-771-8312

문화부, 주민들이 만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지정

지역문화정책과, 2021.01.07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2차 문화도시로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총 5곳을 지정하고 2021년 새해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진단하고 지역 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문화의 설계자로서 참여한다. 이처럼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과가 관련 산업으로 연계·확산됨으로써 '지역 문화'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각 문화도시가 고유한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결과]

지자체	사업명
인천 부평구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
강원 춘천시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적 삶이 보장되는 전환문화도시 춘천
강원 강릉시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시나미 강릉
전북 완주군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경남 김해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국토부, '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

도시경제과, 2021.01.10



국토교통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캠퍼스 챌린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시티 챌린지는 기업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타운 챌린지는 중소도시 규모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같이 지역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실험하고 사업화하는 '캠퍼스 챌린지'가 도입된다.

올해는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보급하여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2021

스마트 챌린지 사업

도시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합니다

Smart
Challenge

기업·대학 등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기존도시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혁신적이고, 효과성 높은 서비스를 발굴·실증하고, 확산하는 선도형 스마트시티 사업

개편방향

“현재까지 28개 도시에서 125개 서비스 실험 중”

기존 스마트 챌린지

시티 챌린지 도시 전역 솔루션

타운 챌린지 지방별 활용 특화 솔루션

솔루션 챌린지 단일 솔루션

서비스 발굴 및 실증

+ 서비스 보급



시티 챌린지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로
도시전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 구축



타운 챌린지

중소도시 특화형 솔루션 신규
발굴·실증 중점분야
(교통·환경·방범) 지정하여 공모

캠퍼스 챌린지
(신설)

대학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역에서 실험하고
사업화까지 연계 추진

솔루션 확산
(변경)

실증을 통하여 검증된
대표 서비스를 지자체에
보급하여 국민 체감 확산

주요내용

City

Town

Campus

Solution

도시전역 (대규모)
종합서비스 발굴

중소규모 지자체
특화 서비스 발굴

대학 아이디어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검증된 우수
서비스의 확산

신청주체

민간기업·지자체
공동 신청지자체
단독 신청대학·기업·
지자체 공동 신청지자체
단독 신청

사업대상

모든 시·군

인구 50만 이하
시·군·구

대학

모든 시·군·구

사업기간

예비사업 1년
+ 본사업 2년

1년

최대 2년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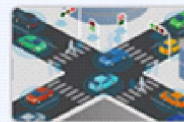
선정규모

7곳
(예비사업 4, 본사업 3)

7곳

8개 대학, 7개 팀

22곳 내외

지원규모
(개소당)215억
(예비 15억, 본사업 200억)30억
(국비 50%)15억
(국비 100%)40억/20억
(국비 50%)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KR105
국토연구원

LH

KAI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서울시, 수도권 주택 공급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8곳 선정

주택정비과, 2021.01.15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

*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천호로 추산된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용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부, 정주 여건 회복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도시재생과, 2021.01.26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사업지에 최대 5억 원의 국비를 지원

공모사업 신청 대상은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사업의 지원 대상 분야는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4대 핵심 분야이며, 이러한 분야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역 도시재생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결합하여 정비

주거환경개선과, 2021.01.08



도시
정책



서울시는 양천구 엄지마을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7일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을 본격추진한다고 밝혔다.

* 열악하고 불량한 노후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고시한 엄지마을 정비계획은 도로포장, 벽화 및 조명설치 등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서울시내 첫 번째 사례로써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해 일부 노후주택은 철거 후 약 300호 규모의 새 아파트를 신축한다.

전면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고쳐쓰므로써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로·CCTV 등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새롭게 지정했다.

부산시, '경부선 철도 유휴부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물류정책과, 2021.0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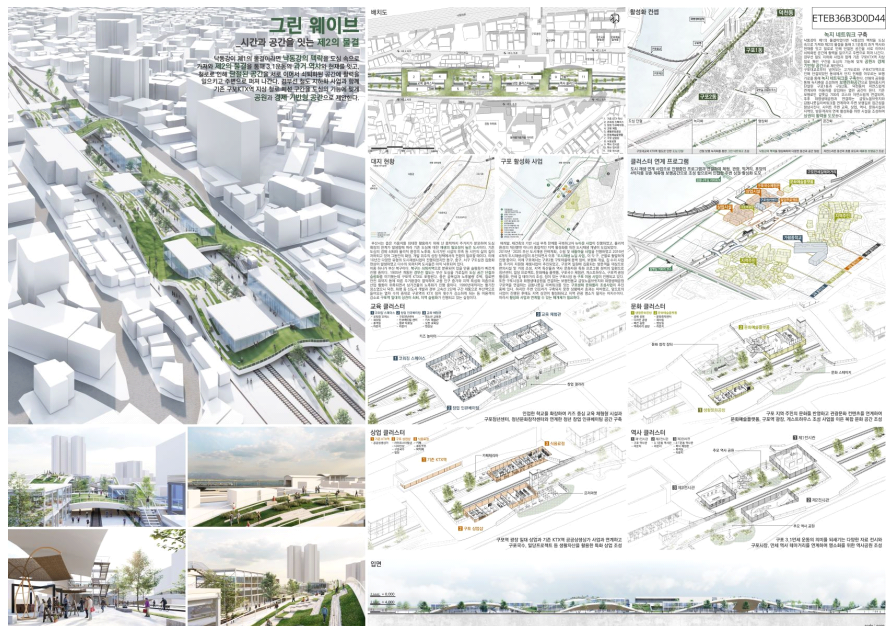
완료

도시
정책

부산시가 지난해 9월부터 3달간 진행한 「경부선 철도 유휴부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로 발생하는 구포역·사상역·서면·부산진역 권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대개조와 그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그린 웨이브 시간과 공간을 잇는 제2의 물결’은 구포역 지역의 기존 도시재생 연계사업과 연결하여 콘텐츠 측면에서 교육, 문화, 역사, 상업측면에서 클러스터적 접근 방식을 도입 시도 하고, 구포 역사 주변의 침체된 상권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린 웨이브 시간과 공간을 잇는 제2의 물결]

광주시, 21년도 도시숲 사업 대상지 25곳 선정

공원녹지과, 2021.01.14



광주시는 지난해 12월15일 ‘2021년 도시숲 조성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사업 대상지 2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숲 조성 대상지는 충장동행정복지센터 등 녹지한평늘리기사업 15곳, 금호시영1단지 아파트 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2곳, 월곡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등 녹도조성사업 2곳, 서광주로 가로숲길 조성사업 1곳, 대동고교 등 학교 내 미래숲(명상숲) 조성사업 5곳 등이다.

광주시는 도시숲 조성사업으로는 도시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도심 내 자투리공간 녹지한평 늘리기, 열린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보행자도로 녹지공간 조성, 주요 도로변 가로숲길 조성, 학교 숲 조성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확대 추진

자연재난과, 2021.01.29



광주광역시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 성능이 확보된 민간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을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는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내진보강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과 인증수수료를 90%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올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5% 감면제도도 도입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심녹화 위해 '그린커튼' 조성사업 87곳 추진

기획담당관, 2021.01.25



건축
정책



환경

경기도가 올해 도내 관공서, 학교, 도서관, 임대주택 단지 등 87곳을 대상으로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린커튼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 외벽에 덩굴식물을 덮어 여름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벽면녹화 공법이다. 좁은 공간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 미세먼지 저감, 도심 열섬현상 완화, 경관 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성비’ 좋은 도심녹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대상을 수상한 수원시 정책에도 전역에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도와 시·군 간의 정책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학교 13곳, 도서관 31곳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분야 84개 공간에 그린커튼을 우선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도민이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 3곳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그린커튼 조성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의 기존 매뉴얼과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토대로 ‘경기도 그린커튼 만들기’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심미적 효과가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쉬운 그린 커튼 도입식물 품종을 추가 개발하는 등 도심녹화 후속 사업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충북도, '우리마을 뉴딜사업' 3,079 마을 3,673개 사업 추진

균형발전과, 2021.01.07



도시
정책

충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침체된 도내 전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사업 발굴을 시작으로 12월까지 3,673개 사업 중 3,660개 사업을 완료(99.6%)했다.

기존의 관(官) 주도의 사업과는 달리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꼭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신청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11개 시군 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쉼 없이 추진돼 주민의 만족도가 타 사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4개 지구 선정

주택건축과, 2021.01.06



주택
정책

전라북도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4개 지구, 360호가 선정되며 읍·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위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변 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 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경남도, 청년주택 추가 개소 등 '2021년 청년 주거지원정책' 추진

건축주택과, 2021.01.07



경상남도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에도 청년 주거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청년주택 공급 확대

김해 삼방동 청년주택 '거북이집 2호'를 3월 개소하여 청년에게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게 된다. 경남도는 유형별 청년주택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과 '맞춤형 청년주택' 사업비를 확보하여 각 1개소 씩, 총 20호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② 청년의 전월세 부담 완화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차계약한 무주택 청년 300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③ 주거실태조사·정보플랫폼 구축

도내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도민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상향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남도,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10곳 추진

건축주택과, 2021.01.20



경상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공개공지*에 대한 되살리기 사업을 실시한다.

*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등 대형건축물 건축시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준다.

경남도는 5년 이상 경과된 도심지 주요 가로변 공개공지 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10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민 활용도, 공공성, 접근성, 노후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공개공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산업부,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국가표준 제정안 확정 고시

기계융합산업표준과, 2021.01.18



건축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의 체계적·최적 관리를 위해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이하 BEMS)*에 대한 국가표준 (KS) 제정안을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내 주요 공간·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에너지소비 절감과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에 활용하는 최첨단 ICT 시스템

BEMS와 관련한 국제표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금번 KS제정은 BEMS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체계를 구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BEMS 업계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표준으로 정립하고, BEMS를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동 시스템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제정된 BEMS KS는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체계를 운영 전주기에 걸쳐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BEMS KS (KS F 1800-2) 주요내용]

단계	내용
수집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데이터의 측정지점*과 수집방식을 제시하여 데이터 누락과 불필요한 수집을 방지함으로써 비용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기 간 정보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성을 강화한다.
분석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코드를 표준화하고, 데이터의 종류·단위·검증 등 분석정보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활용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에너지절감량 효과 산정 기준·방법*을 표준화하여 체계적·객관적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달청, 건설현장 관리 지원하는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 구축

공사관리과, 2021.01.21



조달청은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조달청의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건설근로자의 구직, 건설업체의 기술자 수급, 수요기관의 공사현장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상반기 중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 일자리지킴이를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확산 도모하는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녹색건축과, 2021.01.28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기술적 지원과 지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의 첫 발을 내딛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 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및 6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대학, 연구소 등 지역의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그린리모델링의 당위성 등을 알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도시계획과, 2021.01.18



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을 비롯해 시가 그동안 수립한 도시기본 계획부터 각 사업별로 따라야할 지침과 세부기준, 위원회 안전별 심의 기준까지 도시·건축 분야 정보를 한 곳에 총망라한 ‘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도시·건축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뿐 아니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안전을 검토하는 심의위원, 업무담당 공무원, 일반시민까지 도시·건축 분야 주체들이 사용하는 자료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는 위원회 운영기준 및 매뉴얼, 지침 및 세부기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단행본, 5가지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연계자료(과거이력) 검색 기능, 방대한 문서에서 본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해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광주시,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구축 등 시민 친화적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

스마트도시담당관실, 2021.01.25



광주광역시 스마트조성위원회, 시민참여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스마트화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스마트도시조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조성을 목표로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종의 시민 친화적 스마트도시과제 발굴·추진’, ‘고객지향 빅데이터 구축’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광주 스마트도시조성 목표]

목표	내용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체계 구축	정책수립, 시행, 평가 등 전반적인 정책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조성추진체계를 3월까지 구성
선택과 집종의 시민 친화적 스마트도시과제 발굴·추진	시민사회단체, 대학, 자치구, 테크노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종의 시민 친화적 스마트도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고객지향 빅데이터 구축	정확한 행정수요 예측으로 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생산적 행정수행을 위해 고객지향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운영

경기도, 도내 공유시설 온라인 예약서비스 '경기공유서비스' 시행

정보기획담당관, 2021.01.06



체육시설, 행사장/강당 등 경기도내 공유시설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이용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서비스 '경기공유서비스'가 시작됐다.

경기공유서비스에는 도와 경기도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행사장/강당, 강의실, 운동장 등 307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에서 개방하는 모든 시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공유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과 자원분류를 선택해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빠른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도를 기반으로 시설 위치를 제공해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이 어디인지도 알려준다. 또한 360° VR (가상현실)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해 사전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한다.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건축과, 2021.01.21



강원도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국 광역도 중 최초로 설치되어, 21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도내 중소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계도 활동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건축물 42만여동중 관련법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등 관리중인 건축물을 제외한 19만여동중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안전에 위협이 있는 건축물과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남도,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건설정책과, 2021.01.13



도시
정책

충남도는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은 방법·방재, 교통, 환경, 시설물 관리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광역 중심의 정보공유 및 활용, 인프라 공유로 도입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 제공 서비스는 112센터 긴급영상·출동, 수배차량 검색, 119 긴급출동, 재난상황 긴급대응 등 6대 스마트도시 안전망서비스로, 도민 안전도를 높인다. 특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노선버스 운행관리 시스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서비스 제공, 도민 안심귀가 서비스 등 11개 충청남도 특화 서비스를 통해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충남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빈집 실태조사 완료

건축도시과, 2021.01.10



건축
정책

충남도는 전국 광역 도에서 처음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빈집 실태조사는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인식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빈집활용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앞서 2018년 12월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15개 시군에서 빈집실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올해 철거 대상 빈집(3~4등급)을 대상으로 역점시책으로 3개년에 걸쳐 정비·철거하고, 한국감정원과 협의해 빈집정보시스템에 빈집을 매매·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화 할 계획이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